

POLITICS

2025년 8월 4일 월요일

“돌봄,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해야”

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전남도는 지난 16~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면 측량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2일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재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저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도 지원 대상자가 빠져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울해의 섬 ‘완도 여서도’
7~8일 해양영토 순례나서

전남도는 오는 7~8일 풍광이 뛰어난 완도 청산도 부속섬 여서도 일원에서 일반인과 학생 등 110명이 참여하는 해양영토 순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 치유 1번지인 완도에 서의 해양치유 체험과 영해기점 유인도인 여서도 해상 순례를 통해 섬과 바다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고찰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남대학교 실습선 ‘새동백호’에 승선해 여서도 앞바다를 항해하며 국토 외곽 면섬의 의미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완도 해양치유센터 체험, 전문가 토론, 여서도 영해기점 퍼포먼스, 어로작업 참관 및 조타실 견학, 해양영토 특강, 완도사랑 퀴즈, 제6회 섬의 날 행사 참여 등 다채로운 체험과 활동이 준비됐다.

순례 참가자는 섬의 자연과 생태, 사람과 삶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보다 넓은 시선으로 섬과 바다를 바라보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영토 순례를 통해 섬과 바다의 가치가 미래 성장동력임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자 한다”며 “이러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국회서 돌봄국가책임제 방향성 제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2년간 2만3000명 서비스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부가 제시한 ‘국가는 예산·인력지원, 지자체 돌봄 주제’에 대해 광주형통합돌봄 모델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탄생, 지금 왜 어떻게’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제안한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지자체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2년여동안 가정방문 5만6000여건을 실시했으며 총 2만3000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지원 없이 연간 1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정부 돌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13종의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했다”며 “가사지원, 방문목욕, 병원동행, 식사배달, 간호사 방문간호, 대청

소, 방역·방충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내의 인정을 받아 서울·부산·제주 등 지자체와 국회의원연구모임, 보건복지부 등에서 47회에 걸쳐 벤치마킹을 했으며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34회 연구주제로 채택됐다”면서 “2023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연금을 받아 통장에 돈이 쌓여 있지만 치매를 겪으며 혼자 쓰레기터미에 살고 있는 어르신이 돌봄 매니저들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면서 “경제적 관점에서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65개 기관 1166명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다. 1인당 41만원(10개월)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를 계기로 지난해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는 “돌봄은 민주의 다른 이름으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면서 “자유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는 돌봄을 통해 지켜지며 돌봄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연금을 받아 통장에 돈이 쌓여 있지만, 치매를 겪으며 혼자 쓰레기터미에 살고 계시던 어르신이 돌봄 매니저들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다”며 구체적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돌봄의 가치를 부각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65개 기관 1166명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으며, 돌봄서비스는 1인당 41만원(10개월)의 의료비 감

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내년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월 정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돌봄 담당자를 초청해 ‘돌봄시대 선포식(가칭)’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 개혁법안 속도전...야,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상정...‘살라미’식 처리
국민의힘, 본회의장서 진행 방해 대응...입법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해 4일 국회에서 입법 대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추가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혁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1일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처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기업 죽이기 법’으로, 방송3법은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위해 본회의장을 지키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직까지

꾸렸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되는 것은 1년 만이다.

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본회의 토론 발언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80석 이상(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이 토론 종결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간이 24시간이 지나면 종결되고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도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는 5일 종료된다. 결국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펼쳐도 재정법

5개 중 1개 법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열어오는 오는 21일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21일부터 이들 법안들이 차례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지연 효과 밖에 없다”고 하거나,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외에도 검찰개혁 입법도 추후 전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태 대표는 지난 2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약속했던 대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속적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성오 기자 slee235@gwangnam.co.kr

李대통령 ‘저도 구상’ 정치권 주목

한미회담·광복절 특사 고심
이달 국내·외 현안 ‘빠곡’
여당과의 관계설정 관심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저도 구상’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여권발 조국사면론 등 나라 안팎으로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임에도 정국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르며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 하계휴가 기간은 4~8일이다.

대통령실은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들도 하나같이 엄중한 시간들인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의 온전히 마음 편한 휴가를 보내기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한미정상 회담이 꼽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이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소

거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다듬는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한 줄기만 공개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과 함께, 관세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안보 패키지’가 정상회담의 주요 논

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린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도 비중 있게 거론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할지가 최대 화두다. 특히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되 홀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휴가를 이용해 대략적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15일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식과 ‘국민인명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재태 신임 대표가 선출된 만큼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성오 기자 slee235@gwangnam.co.kr

행안부 경찰국 폐지...“중립·민주적 통제 강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

견조화,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